

지금 기록학 공동체가 기록학의 지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설문원 저, 『기록학의 지평』, 조은글터, 2021

이승억(Lee, Seung-eok)*

『기록학의 지평』(설문원 저, 2021, 조은글터)은 기록학 연구자는 물론 현장 전문가 또한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지금 한국의 기록학계를 돌아볼 때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저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9년 공공기관기록관리법 제정이 한국에 기록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는 아마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학회와 단체가 생겼고, 대학에서는 학과와 교육원이 만들어졌으며, 그곳을 졸업한 전문가들이 법의 배치 의무 규정에 힘입어 공공기관 기록관리직에 임용되었다. 이는 분명 인상적인 진전임에 틀림없다. 다만 학문으로서 기록학이 이러한 압축적 제도화에 동반하여 성장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저자의 진단은 이렇다. 기록학 연구가 20여 년간의 양적 성장에도 정작 학계가 공유하는 이론적 기반은 여전히 협소하며, 이는 학계가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여 온 일관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근본적 처방 대신 증상만을 다루는 ‘대증적(對症的) 방법론’에만 급급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저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yise@korea.kr).

실용적인 응용학문으로서 기록학이 사회적 수요와 밀접해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론적 토대를 도외시하는 것은 기록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하는 것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책의 제목인 ‘지평’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대지의 단단한 면이라는 의미이면서 또한 어떤 전망이나 가능성을 비유할 때 쓴다. 아마도 저자가 지평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기록학이 기반해야 할 단단한 이론적 기반과 그 가능성의 전망을 함께 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기록학의 지평을 논의하는 주요 틀로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네 가지를 들었다. 이 네 가지는 테리 쿡(Terry Cook)의 네 가지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쿡의 패러다임은 19세기 중반 고전적 단계의 기록관리에서 21세기 첨단 디지털 기술환경에서의 기록관리까지 포괄한다.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증거 패러다임은 생산의 주체가 그 환경을 원점으로 하여 기록의 가치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기억 패러다임은 기록에 담긴 사물과 사건, 인물의 내력을 통한 서사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 둘은 각각 켄킨슨(H. Jenkinson)과 쉘렌버그(T. Schellenberg)의 이론에 그 정수가 담겨 있다. 정체성과 공동체 패러다임은 증거나 기억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록의 본질과 그 의미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체성 패러다임은 기록을 통해 발현되는 지역이나 시대, 분야와 같은 일정 영역의 집약된 종합적 본질을 추구하려는 시각에 부합한다. 이에 비해 공동체 패러다임은 하나의 단일화된 본질보다는 사회의 다원화되고 개별화된 복수의 진실을 수용하여 이를 설명하려는 관점에 유용하다.

이상 네 가지 패러다임은 증거와 기억 그리고 정체성과 공동체를 묶어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증거와 기억이 기록의 의미와 본질을 이루는 구성적 요소에 천착하려 한다면, 정체성과 공동체는 거시적 시각에서 기록의 사회적 관계성이나 효과성에 주목한다. 쿡의 네 가지 패러다임은 기록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 영역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는 점에서 저자가 이를 기록학의 지평을 논하는 중심 틀로 삼은 것은 타견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쿡의 네 가지 패러다임에 그 의의와 내용을 좀 더 보강함으로써 생산적 변주를 시도했다. 또한 네 가지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하되 그 논의에 앞서 기록의 개념을 정초(定礎)하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디지털시대에서의 기록학의 전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논의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록의 정의, 증거와 정보 담론, 지역 공동체 기록화 등 그간 저자의 정력적 연구 결과들이 기록학의 지평에 대한 고민을 근간으로 새롭게 엮여 있다.

제2부의 증거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록학자로서 저자의 고민이 특히 분명하게 느껴진다. 저자는 법적 증거와 역사의 증거를 거쳐 기록학적 증거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독자들은 연혁이나 내용면에서 법학과 역사학에서의 증거 담론이 기록학의 그것에 비해 발달해 있음을 저자의 책을 통해 충실하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의도는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적 증거나 역사적 증거 담론이 고유의 상대적이고 구성적인 성격을 보이면서도 학문적 보편성에 근접해 있는 것처럼 기록학적 증거 개념 또한 기록학 연구의 안정적 토대이면서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인 것 같다.

기억을 다룬 제3부에서는 각종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던 한국에서 기록학계가 기여해야 할 지점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좌표를 제시하려 하였다. 제4부 정체성과 제5부 공동체에서는 저자가 현장 참여 그리고 연구 양면에서 정력적으로 관여한 로컬리티 기록화나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진정성 넘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가지, 제3부와 제4부와 관련해서는 패러다임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의 근본적 차이가 좀 더 명료하게 부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 본다.

마지막 6부 전망과 과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의 문제이다. 이

또한 그간 저자의 학문적 고민의 결과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기록의 고정성과 물질성, 활동 재현물로서의 성격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기록의 물질적 고정성은 디지털 시대 이전 장기간의 물질기록 시대의 통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경우 기록의 물질성이나 고정성에 대한 개념사적 유래와 같은 메타 개념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덧붙여 본다. 한편 전자증거개시제도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된 디지털 기록의 사법 증거화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록학적 맥락에서의 디지털 증거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저자가 이를 기록학이 포섭해야 할 주제로 본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단계에서 기록학의 지평을 돌아보는 것이 왜 시의적절한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저자도 언급했듯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기록을 둘러싸고 벌어진 현상에 대한 기록학계의 대응 양상은 기록학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컨대 공공기록관리법 관련 재판의 판사 그리고 재판을 지켜 본 법률 전문가들 중 일부가 공공기록관리법의 일부 규정 그리고 규정 사이의 관계에서 법으로서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기록학계로서의 대응이나 논의가 충분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기록학 공동체는 그 이유를 찾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해법을 찾는 일은 지금의 기록학계의 학문적 지평이 넓지 않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출간이 시의적절하다고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